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4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공공조달의 광의적 정의가 전통적인 물자 확보 관점에 더하여 강조하는 것은?

- (1) 민간기업의 모든 구매를 정부조달로 분류하는 역할
- (2) 계약금액을 세금 수입과 동일시하는 역할
- (3) 구매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의 성과를 지원하는 역할
- (4) 재고 입고만을 조달의 종점으로 삼는 역할

2. 시민이 세금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조달 결과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은 해당 구매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시민의 지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1) 세금을 납부했다면 개별 구매계약의 공급자로 분류한다.
- (2)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최종 이용자이자 공공조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
- (3) 구매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조달 이해관계자가 될 수 없다.
- (4) 시설을 이용하면 납품업체의 계약상 채무를 대신 부담한다.

3. 공공조달에서 예산 배분과 집행의 설명책임이 중시되는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 (1) 공급기업은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 (2) 모든 조달 대상물이 무료이기 때문이다.
- (3) 시민은 조달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4) 공적 재원을 사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4. 서로 독립된 것으로 보였던 입찰자들이 가격을 사전 조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고가 공개되었고 입찰서가 여러 장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원칙은?

- (1) 조달수요의 통합성
- (2) 실질적 경쟁
- (3) 납품 장소의 적정성
- (4) 계약기간의 충분성

5. 여러 기관이 동일 규격의 소모품을 정기적으로 구매한다. 구매수요를 한 기관이 통합해 조달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 (1) 각 기관이 서로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정도가 커진다.
- (2) 조달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므로 원래의 구매수요 확인이 없어져도 된다.
- (3) 통합 물량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쉬워진다.
- (4) 기관별 모든 특수수요에 대한 대응시간이 자동으로 짧아진다.

6. 일반경쟁 공고를 본 업체가 '일반경쟁이므로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정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면허가 없으면 발주기관이 입찰서 제출과 동시에 면허를 발급한다.
- (2) 일반경쟁은 필요한 면허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 (3) 일반경쟁에서도 관련 법령과 공고가 요구하는 기본 참가자격은 확인한다.
- (4) 면허 필요 여부는 낙찰 후 업체가 선택한다.

7. 발주기관이 사전 조사로 적합한 업체들을 선정하여 공식적으로 입찰에 초대하고, 초대된 업체 간 경쟁을 실시한다. 해당 방식의 특징은?

- (1) 공급자 지명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뒤에 이루어진다.
- (2) 지명된 업체는 가격과 기술조건을 제출하지 않는다.
- (3) 공급자를 지명하되 낙찰을 위한 경쟁은 유지한다.
- (4) 초대장을 받으면 해당 업체 모두가 같은 계약의 낙찰자가 된다.

8. 표준품의 견적 요청을 준비할 때 제시할 정보로 가장 적절한 묶음은?

- (1) 품목·수량·요구규격·납품조건과 견적 제출조건
- (2) 예산 잔액만 제시하고 필요한 품목은 업체가 임의 결정
- (3) 최저 견적 제출업체의 이름을 먼저 지정
- (4) 담당자의 개인 선호와 기존 업체의 희망이익만

9. 기관이 전자입찰과 제안서 평가 기능은 갖추었으나, 주문서와 송장을 서로 대조하지 못하고 대금지급 자료를 다시 입력한다. 우선 보완할 기능군은?

- (1) 입찰자의 기술제안서 분량 확대
- (2) 전자적 구매·지불 처리
- (3) 공급자 모집광고만 추가 게시
- (4) 입찰참가자 모집·공급업체 탐색 기능만

10. 혁신제품 전용물의 표시가격을 보고 그 금액이 조달청과 이미 체결한 계약단가라고 판단하였다. 교재 설명에 따른 적절한 해석은?

- (1) 혁신제품이면 가격은 존재하지 않고 모두 무상 공급된다.
- (2) 업체의 판매희망가격일 수 있어 실제 계약가격과 구분해야 한다.
- (3) 등록된 혁신제품의 표시가격은 법정 고정가격이어서 바뀔 수 없다.
- (4) 표시가격이 있으면 계약상대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11. 이음장터에서 행사운영 서비스를 찾은 기관이 실제 계약 전에 공급업체와 구체화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 (1) 페이지 추천 수와 광고 문구의 느낌만
- (2) 업체 소개 화면의 글자 크기만
- (3) 과업범위·가격·제공시기·이행확인 조건
- (4) 기관 담당자의 사적인 관심사만

12. 분류체계에 새 기술 제품도 수용할 수 있도록 분류의 범위를 설계하려 한다.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은?

- (1) 최저가격 우선성
- (2) 계약기간 고정성
- (3) 기존 거래업체 우선성
- (4) 포괄성

13. 제품의 제조업체와 모델은 그대로인데 분류체계 정비로 소속 품명이 바뀌었다. 교재가 설명하는 물품식별번호의 성격은?

- (1) 품명 변경 때마다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뀐다.
- (2) 분류 변경만으로 해당 제조업체·모델의 식별번호가 바뀌지는 않는다.
- (3) 분류가 같아지면 서로 다른 모델의 식별번호도 하나로 합쳐진다.
- (4) 분류코드와 식별번호는 어떤 경우에도 구분할 수 없다.

14. 기관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세 종류의 물품을 한 계약으로 묶자 각 품목 전문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워졌다.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발주단위 재검토로 적절한 것은?

중소기업 접근성 개선이라는 설계 관점을 묻습니다. 특정 국내 사업에 분할발주가 허용된다고 확정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 (1) 여러 품목이 있으므로 이행상 연관성과 경제성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나눈다.
- (2)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말하면 금액기준 회피 목적의 분할도 모두 정당화된다.
- (3) 계약을 가장 크게 묶을수록 중소기업의 참여 장벽이 항상 낮아진다.
- (4) 독립성·이행관리·경제성 및 적용 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분리 가능성을 판단한다.

15. 가상 공고는 품목 X에 대한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자료를 요구한다. 업체의 확인서는 품목 Y에만 적용되며 X와 Y의 확인 범위는 서로 다르다. 적절한 판단은?

가상 공고의 직접생산 요구가 적법하고, X와 Y는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며 별도 예외는 없습니다.

- (1) Y의 확인서 유효기간이 길면 X의 확인을 갈음한다.
- (2) 발급받은 업체가 같으므로 품목 X에도 적용한다.
- (3) X와 Y의 판매가격이 같으면 같은 확인 범위로 본다.
- (4) 품목 Y 확인서만으로 품목 X의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16. 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했지만 연말 실적을 집계하지 않았다. 제도 이행을 확인하는 보고로 적절한 것은?

- (1) 계획 수립·공표는 확인되었으나 실제 구매실적의 집계·제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2) 연말 실적이 없으면 연초 계획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 (3) 계획을 공표했으므로 그 계획액을 실제 구매실적으로 본다.
- (4) 제품 인증기관이 기관의 구매실적까지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본다.

17.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목록과 수의계약 가능 대상을 검토한다. 교재는 두 범위를 구별하여 설명한다. 담당자가 적용해야 할 판단은?

- (1) 우선구매는 인증기관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낙찰자를 정하는 절차이다.
- (2) 우선구매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된다.
- (3) 우선구매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수의계약을 선택하려면 별도의 적용 근거와 요건도 확인한다.
- (4)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은 경쟁입찰에서 구매할 수 없다.

18. 기관이 “기존 장비의 처리속도를 조금 높이기”보다 “접근이 어려운 현장의 안전점검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목표로 한다. 혁신조달 과제를 설계하는 접근으로 적절한 것은?

- (1) 구매기관의 현장 문제를 빼고 업체의 홍보 계획만으로 과제를 확정한다.
- (2) 해결할 공공문제와 요구 성과를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다.
- (3) 기존 장비의 외형을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만을 혁신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 (4) 제품명이 새롭다는 광고 문구만으로 공공문제 해결 효과를 인정한다.

19. 가상 기관의 내부 목표는 물품과 용역 각각 구매액의 5%이다. 물품은 총 4억 원 중 3천만 원, 용역은 총 6억 원 중 2천만 원을 여성기업에서 구매했다. 해당 내부 목표만 적용한 판단은?

5%는 문제에 명시된 내부 목표입니다. 현행 법정 비율·실적 인정 예외를 확정하는 문항이 아닙니다.

- (1) 합계는 5%이지만 물품은 충족하고 용역은 미달한다.
- (2) 전체 구매액의 5%이므로 두 분야가 모두 충족한다.
- (3) 물품 3%, 용역 2%이므로 모두 미달한다.
- (4) 물품은 미달하고 용역은 충족한다.

20.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한 승낙 통지가 늦게 도달했다. 통상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된 것이고, 청약자는 도달 전 지연 통지를 보내지 않았으며 도달 후에도 지체 없이 연락 통지를 하지 않았다. 민법 제528조에 따른 처리는?

제시한 발송·도달·통지 사실이 확정되었고 민법 제528조의 일반 규정만 적용합니다.

- (1) 승낙의 통지가 연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2) 발송 사정과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늦은 승낙은 효력이 없다.
- (3) 청약자는 언제든지 원래 청약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일 수 있다.
- (4) 승낙자가 다시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상 무효가 된다.

21. 채무자의 일반적인 이행지체가 발생했다.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나 정기행위 등 최고를 생략할 사유는 없다. 민법 제544조에 따른 해제 절차로 적절한 것은?

채권자는 필요한 자기 의무의 이행 등 해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고, 최고 생략 사유는 없습니다.

- (1) 변제기를 하루 넘기면 최고나 다른 요건 없이 모든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
-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 (3) 채무자의 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계약금액을 임의로 두 배로 변경한다.
- (4) 상당한 기간을 주었더라도 법원 판결 없이는 어떤 해제도 할 수 없다.

22. 민법 제733조에 따른 화해계약과 착오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사기·강박·무효 등 다른 쟁점은 제외하고 제733조의 원칙과 예외 구조만을 묻습니다.

- (1)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도 제733조상 예외에서 제외된다.
-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분쟁 이외 사항의 착오는 예외로 구별한다.
- (3) 분쟁 대상에 관한 판단이 달라지면 모든 화해를 자유롭게 취소한다.
- (4) 화해계약에서는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당사자든 이유 없이 즉시 철회한다.

23. 여러 해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같은 것으로 분류했다. 두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할 핵심은?

- (1) 최초 사업 명칭에 “계속”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확인하면 된다.
- (2) 공사이면 계속비계약, 용역이면 장기계속계약으로 일률 분류한다.
- (3) 계약상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 (4) 연도별 예산 범위에서 체결하는 구조인지, 계속비 총액과 연부액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지이다.

24. 법령상 사용할 수 있는 낙찰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이유로, 개찰 후 결과를 본 담당자가 당초 공고한 방식 대신 자신이 선호하는 다른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법정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찰 후 공고된 낙찰방식을 임의로 교체할 수는 없다.
- (2) 낙찰예정자가 동의하면 다른 참가자에게 영향이 없으므로 곧바로 바꾼다.
- (3) 법령에 있는 방식끼리는 어느 시점에서 바꾸어도 입찰조건 변경이 아니다.
- (4) 새 방식에서 가격이 더 낮아지면 변경 절차나 사유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25. 업체 직원이 허위 납품자료를 신고하려 한다. 신고 접수의 적절한 운영은?

- (1)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이름을 조사대상 업체 전체에 먼저 공개한다.
- (2) 신고만 하면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모든 신고자에게 정액 포상금이 지급된다.
- (3) 신원보호가 필요하면 사실관계 자료도 받을 수 없다.
- (4)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받되 신고자 신원 등 보호해야 할 정보를 정해진 절차로 관리한다.

26. 계약담당자가 전자공개수의 절차를 설계하며 “모든 수의계약은 사유와 관계없이 반드시 같은 수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적절한 검토는?

- (1) 국가·지방 등 적용 계약법령의 견적 요건과 예외를 확인한 뒤 전자 제출 절차를 정한다.
- (2) 전자조달시스템을 쓰면 관련 계약법령의 견적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 (3) 수의계약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공개 안내와 견적 비교는 전부 생략한다.
- (4) 선호 업체가 견적을 한 장 내면 나머지 법정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27.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절차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다. 교재에 인용된 계약사무규칙의 의견진술 기록 절차로 적절한 것은?

- (1) 직원이 결론만 작성한 후 출석자의 확인 없이 진술서로 확정한다.
- (2) 출석자가 말했으므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원의 기억만 보존한다.
- (3) 진술서를 작성하면 의견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제재가 자동 취소된다.
- (4) 관계 직원이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출석자에게 확인하게 한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는다.

28. 한 기관이 “우리 계약을 무조건 적법하다고 답해 달라”는 질의서를 보내려 한다. 검토 가능한 질의로 고치려면?

- (1) 질의기관이 바라는 결론을 세 번 반복하면 사실자료를 대신할 수 있다.
- (2) 계약금액만 적으면 기관과 계약 유형은 어느 경우에도 필요 없다.
- (3)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불리한 계약조건과 변경 경위를 삭제한다.
- (4) 계약 유형·적용 규정·확인된 사실과 해석이 필요한 조항·쟁점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29. 기관이 계약 종료를 결정한 내부 회의록만 작성한 뒤, 계약상대자에게 전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종료 통지 완료”로 표시했다. 필요한 보완은?

- (1) 종료의 근거·요건과 상대방에게 한 의사표시의 내용·전달 기록을 구분하여 확인한다.
- (2) 계약 종료는 계약상대자에게 내용을 알릴 수 없는 비밀 행위이다.
- (3) 내부 회의록 작성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자 통지와 같은 사실이다.
- (4) 메일 제목만 “종료”로 입력했으면 실제 발송이나 내용은 확인하지 않는다.

30. 조달청이 자체 점검에서 계약규격과 다른 납품 정황을 발견했지만 외부 신고서는 없다. 교재의 조사 개시 방식에 맞는 설명은?

- (1) 직권 조사를 하면 의견 확인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2) 신고자가 없으면 확인된 위반 정황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할 수 없다.
- (3) 외부 신고와 별개로 직권 조사 등의 개시 근거를 검토할 수 있다.
- (4) 자체 점검 정황은 조사 없이 확정된 위반 사실과 같다.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한 기관의 요구 처리속도가 유사 사업보다 현저히 높다. 공급업체의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 (1) 가장 낮은 타 기관 규격을 모든 입찰의 기준으로 삼는다.
- (2) 사용 환경과 업무량의 차이를 비교해 높은 요구의 필요성을 확인한다.
- (3) 다른 기관 수치로 현재 요구를 일방적으로 바꿔 제출한다.
- (4) 유사 사업이 있으므로 현재 요구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32. 가상의 필수 소모품 재고는 180개이고 하루 사용량은 30개다. 대체 공급품 도착까지 8일이 걸린다. 재고만으로 버티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최소 물량은? 사용량은 일정하다.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30개
- (2) 180개
- (3) 60개
- (4) 240개

33. 가상의 자료에서 한 계약 5천만원이 기관별 표와 품목별 표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두 표를 합쳐 1억원의 별도 수요로 집계했다. 수정 방법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항상 두 표 합계의 절반을 전체 수요로 확정한다.
- (2) 계약 식별정보로 중복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을 한 번만 계산한다.
- (3) 기관별 표는 모두 삭제하고 품목별 표만 신뢰한다.
- (4) 표가 두 개이므로 두 계약으로 유지한다.

34. 한 부품업체의 매출 대부분이 특정 대형 구매기관에 의존하고, 그 기관은 여러 적격 공급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예상되는 방향은?

- (1) 구매 규모와 공급자의 고객 의존도는 교섭력과 무관하다.
- (2) 업체 수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항상 가격을 결정한다.
- (3) 구매기관의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 (4) 공급업체의 매출 의존도가 클수록 기관의 선택권은 사라진다.

35. 특정 제품 생산에 쓰인 공장 전력비와 본사 관리부서의 관리활동 비용을 구별하려 한다. 교재의 기본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 (1) 제조 관련 경비와 기업 유지·관리활동의 일반관리비를 구별한다.
- (2) 둘은 발생 장소와 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직접재료비다.
- (3) 본사 관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이루는 부품비다.
- (4) 기업 전체 관리활동 비용을 모두 제조 직접노무비로 분류한다.

36. 금액이 작고 대체품이 풍부한 반복 소모품에서 건별 처리비용이 과도하다. 공급방법 개선의 중점으로 적절한 것은?

- (1) 낮은 구매가치이므로 수량 기록을 모두 없앤다.
- (2) 주문·납품·지불의 반복 절차와 대응시간을 효율화한다.
- (3) 매번 고도의 맞춤 기술제안 평가를 추가한다.
- (4) 모든 공급자를 하나로 제한해 대체 가능성을 없앤다.

37.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나라장터의 모든 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전 준비로 적절한 것은?

- (1) 다른 업체의 등록번호를 빌려 쓰면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 (2) 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하면 모든 면허가 부여된다.
- (3) 등록 여부보다 투찰가격이 낮으면 자격을 충족한다.
- (4)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해당 공고의 업종·품목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38. 공개된 구매규격서의 본문은 보관온도를 2~8°C로 요구하지만, 같은 문서의 성능표는 0~10°C 전 구간에서 보관해도 적합하다고 적고 있다. 요구사항이 서로 맞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한 공급업체의 적절한 대응은?

두 문장은 동일 물품의 동일 보관요건을 정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실제 안전기준을 제시하는 문항은 아닙니다.

- (1) 불일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문서를 최종 확정 계약서로 간주한다.
- (2) 불일치 위치와 업무상 영향을 정리해 요구 범위의 명확화·보완 의견을 제출한다.
- (3) 자사 제품에 유리한 표만 적용하고 본문의 다른 조건은 무시한다.
- (4) 규격공개 단계에서는 과업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39. 기관이 의견에 대한 회신을 '첨부 답변서 참조'로 게시했다. 다음 조치로 적절한 것은?

- (1) 회신 제목이 있으면 모든 의견이 수용됐다고 본다.
- (2) 첨부 문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므로 열지 않는다.
- (3) 회신을 삭제하고 최초 질문만 근거로 제안한다.
- (4) 첨부 답변과 수정 규격을 확인해 제기한 쟁점의 처리 여부를 대조한다.

40. 공고에 보안상 별도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상세도면과 열람 신청 절차가 적혀 있다. 적절한 대응은?

- (1) 자료 열람을 생략하고 낙찰 후에만 수행 가능성을 판단한다.
- (2) 지정 절차로 열람을 신청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 (3) 온라인 첨부가 없으므로 도면 관련 과업은 모두 제외한다.
- (4) 경쟁업체의 접근권한을 빌려 자료를 취득한다.

41. 이번 입찰은 보증금 납부를 지급각서로 갈음하지만, 계약단계에는 별도의 이행보증서가 요구되는 조건이다. 업체는 지급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도 이미 승인되었다고 판단했다. 보완할 확인은?

입찰보증 지급각서와 후속 이행보증서 요구가 각각 공고·계약조건에 제시된 사례이다.

- (1) 지급각서를 제출하면 모든 보증기관의 신용심사가 자동 통과된다.
- (2) 계약단계 보증서가 요구되어도 입찰단계 서류로 자동 대체된다.
- (3) 지급각서 제출과 보증기관의 발급심사는 별개이므로 신용상태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보증서의 발급가능성을 미리 확인한다.
- (4) 낙찰 후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어도 계약이행 준비에는 영향이 없다.

42. 설명회 전 제안서 담당자가 준비할 자료로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 (1) 요구규격·평가기준을 읽고 불명확한 조건과 견적에 영향을 주는 질문을 정리한 목록이다.
- (2) 경쟁업체 담당자의 사적인 연락처를 모은 목록이다.
- (3) 설명회에서 어떤 답이 나오든 바꾸지 않을 최종 계약서이다.
- (4) 제안요청서를 읽지 않고 만든 확정가격 광고 전단이다.

43. 국가계약 입찰에서 적법하게 우편 제출을 허용했고 도착 마감은 10일 14시였다. 업체가 9일 발송했으나 지정 장소에는 10일 16시에 도착했다. 유효한 연장 등 별도 사유는 없다.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판단은?

- (1) 정해진 도착시각을 넘겼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 (2) 다른 입찰자보다 가격이 낮으면 지연 도착도 유효해진다.
- (3) 당일 도착하면 시각의 차이는 무시한다.
- (4) 마감 전날 발송했으므로 도착시각과 관계없이 유효하다.

44. 적법한 지명경쟁에서 기관이 A·B·C를 참가대상으로 지명했다. A는 지명통지를 받았으니 견적 비교 없이 자신과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옳은 판단은?

지명경쟁의 적용 요건과 지명 절차가 적법하다는 전제입니다.

- (1) 지명은 경쟁에 참여할 대상의 선정이며 지명된 업체 사이에서 정해진 입찰·낙찰 절차가 남는다.
- (2) 지명업체는 참가자격·계약이행능력 확인을 모두 면제받는다.
- (3) 세 업체가 같은 총액을 임의로 합의하여 제출하면 절차가 완결된다.
- (4) 지명 순서가 곧 낙찰 순위이므로 가장 먼저 통지받은 자와 계약한다.

45. 이미 평가된 제안의 범위를 바꾸지 않고 유지보수 서비스의 “신속 복구” 표현을 구체화하려 한다. 기술협상에서 유용한 합의는?

사업과 관련된 이행조건 명확화가 허용되는 범위라는 전제입니다.

- (1) 합의된 복구시간의 측정 시작·종료시점, 확인자료와 보고방법을 명확히 한다.
- (2) 기술이전과 무관한 사업의 소스코드까지 무상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3) 모든 유지보수 업무를 삭제하면서 원래 평가점수를 유지한다.
- (4) 복구 여부는 공급자 기분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한다.

46. 가상 가격평가식은 “가격점수=20×최저 평가가격÷해당 업체의 평가가격”이다. 최저 평가가격이 7,200만원, A의 평가가격이 8,000만원일 때 A의 점수는?

문제에 제시된 단순 가상 산식만 적용하고 별도의 하한·보정·반올림 조건은 없습니다.

- (1) 20점
- (2) 9점
- (3) 18점
- (4) 22.22점

47. 교재의 협상계약 절차를 요약했다. ㉠ 제안서 접수, ㉡ 기술·가격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성립 후 계약체결의 순서로 옳은 것은?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48. 가상 희망수량 입찰의 최종 배정은 A에게 80개·개당 2만 원, B에게 120개·개당 2만 1천 원이다. 업체별 해당 낙찰단가로 지급하고 다른 비용은 없을 때 총 구매금액은?

학습용 가상 지급조건입니다. 금액은 세금 포함 동일 기준이고 각 업체의 해당 낙찰단가를 적용합니다.

- (1) 412만 원
- (2) 400만 원
- (3) 410만 원
- (4) 420만 원

49. 검토자가 물품의 품질·운영비를 고려하는 종합낙찰제와 시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 같은 평가표를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우선 구별할 것은?

- (1) 물품과 공사의 차이는 납품장소 하나뿐이라는 점이다.
- (2) 두 제도 모두 가격평가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다.
- (3) 이름에 종합이 들어가므로 모든 배점과 적용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 (4) 계약대상과 적용 근거에 따라 평가항목·산식·절차가 달라지는 별도 제도라는 점이다.

50. 교재에서 국제기구의 이의제기 사례와 기간을 읽은 업체가 그 기간을 국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적절한 기준 선택은?

- (1) 해외 사례에 기간이 있으면 국내 법령의 기간은 무효가 된다.
- (2) 모든 공공조달은 국제기구와 같은 기간을 적용한다.
- (3) 해당 국내 입찰에 적용되는 법령·공고·구제절차를 확인하고 국제기구 사례와 구분한다.
- (4) 국제기구 사례가 있으면 국내에는 어떤 이의절차도 없다.

공공계약관리

51. 설치 작업 A는 1~5일에 매일 3명, 시험 작업 B는 4~7일에 매일 2명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같은 날 두 작업을 겸할 수 없고 일정을 바꾸지 않는다. 기간 중 동시에 확보해야 할 최대 인원은?

가상 작업계획이며 인력은 상호 대체 가능하지만 같은 날 겸임은 불가합니다.

- (1) 3명
- (2) 5명
- (3) 4명
- (4) 7명

52. 적기에 정상 이행 중인 계약이 기관의 사업 폐지로 종료될 예정이다. 담당자가 지연·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상대자 귀책 해지 서식을 그대로 적용하려 한다. 먼저 확인할 것은?

- (1) 기관 사정에 따른 종료 사유와 그에 맞는 정산·비용처리 조건인지 확인한다.
- (2) 계약이 끝난다는 결과가 같으므로 귀책사유 구분은 필요 없다.
- (3) 기관이 종료를 원하면 상대방의 불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한다.
- (4) 사업이 폐지되면 기존에 적법하게 완료된 이행도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53. 계약분쟁을 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에게 맡겨 해결하고자 한다.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내부지침만으로 중재를 강제하겠다”고 한다.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은?

- (1) 기관이 중재인을 추천한 사실만 있으면 이미 법원 확정판결이 존재한다.
- (2)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는지
- (3) 내부지침이 있으면 상대방의 중재합의 없이도 중재가 항상 성립한다.
- (4) 분쟁금액이 크면 중재합의가 있다고 간주한다.

54. 계약은 납품 수량·품질뿐 아니라 충격방지 포장을 요구한다. 공급업체는 수량과 출고 성능이 맞으므로 포장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적절한 판단은?

충격방지 포장이 유효한 계약조건이라는 점을 전제합니다.

- (1) 포장도 계약상 조건이므로 정해진 요구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
- (2) 특수 포장은 공급업체가 선호할 때만 적용하는 권고사항이다.
- (3) 수량 확인은 포장과 관계없으므로 납품 검토에서도 제외한다.
- (4) 출고 성능이 적합하면 다른 납품조건은 모두 충족된 것이다.

55. 기관은 핵심 부품 공급 중단을 최대 2일까지 감당할 수 있다. 공급자는 “대체업체가 있으니 대비 완료”라고 하지만 실제 전환·승인·배송에 8일이 필요하고 완충재고는 없다. 위험 대응의 가장 큰 공백은?

일수는 가상 운영 요구와 확인된 전환 소요기간입니다.

- (1) 대체업체가 있으면 전환에 걸리는 시간은 검토대상이 아니다.
- (2) 공급자의 업체 수가 두 곳이면 중단기간은 항상 0일이다.
- (3) 최대 중단기간 2일을 대체업체 소요시간 8일로 내부적으로 바꾸면 계약위험이 해소된다.
- (4) 대체업체의 존재와 별개로 허용 중단기간 안에 실제 공급을 복구할 수 없다.

56. 시운전 조건부 물품계약이 교재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납품업체는 검사공무원이 입회하므로 시운전에 필요한 자재·인력 준비와 수행책임도 모두 기관으로 이전된다고 한다. 적절한 구별은?

교재의 시운전 조건부 계약 방식을 적용한 사례이다. 실제 계약의 특약 유무는 별도 확인 대상이다.

- (1) 입회가 이루어지면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을 하지 않아도 된다.
- (2) 검사공무원이 입회하므로 성능을 보일 필요 없이 납품이 완료된다.
- (3) 검사공무원의 입회와 계약상대자의 시운전 자재·인력 준비 및 수행책임은 구별된다.
- (4) 기관이 입회한다는 사실만으로 시운전의 모든 경비가 기관에 추가 청구된다.

57. 기관은 주계약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했다. 주계약자는 하수급인 뭇도 처리했다고 보고했으나 하수급인은 미수령이라고 한다. 지급 사후관리에서 적절한 확인은?

- (1) 기관이 주계약자에게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하수급인 수령도 확인한다.
- (2) 주계약자의 지급계획서가 있으면 실제 계좌 처리 여부를 볼 필요가 없다.
- (3) 하수급인 주장만으로 전체 계약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다시 지급한다.
- (4) 주계약자의 지급 내역과 하수급인의 실제 수령 자료를 대조하고 차이를 확인한다.

58. 장비 하자가 보증기간 안에 발견·통지되었지만 수리 완료 예정일은 보증기간 종료 뒤이다. 계약담당자는 “수리일이 기간 밖이므로 통지 기록도 버리자”고 한다. 적절한 조치는?

- (1) 수리 완료일만으로 기간 내의 발견·통지 사실은 무의미해진다.
- (2) 발견·통지·보수청구 시점과 계약조건을 보존하여 책임과 처리 범위를 검토한다.
- (3) 통지일을 수리 완료일에 맞춰 사후 수정한다.
- (4) 보증기간이 끝나면 어떤 기발생·기통지 하자도 언제나 소멸한다.

59. 기관이 ㉠ 낙찰 후 계약체결 불이행, ㉡ 계약상 의무 불이행, ㉢ 지급 선금의 반환 위험, ㉣ 인수 후 하자보수 불이행에 대비하려 한다. 적절한 보증 종류 연결은?

- (1) 네 위험은 모두 입찰보증 하나가 기간 제한 없이 동일하게 담보한다.
- (2) ㉠ 하자보수보증, ㉡ 선금보증,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3) ㉠ 계약이행보증, ㉡ 하자보수보증, ㉢ 입찰보증, ㉣ 선금보증
- (4) ㉠ 입찰보증, ㉡ 계약이행보증, ㉢ 선금보증, ㉣ 하자보수보증

60. 학습용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 지체상금의 기초를 해당 연차 계약금액으로 정한다. 총 부기금액은 10억 원이고 해당 연차 계약금액은 2억 원이다. 해당 연차 전체가 4일 지체했고 일률 0.001, 다른 공제는 없다. 지체상금은?

연차별 기준과 지체일수는 확정되었으며 일률은 실제 법정률이 아닌 학습용 값입니다.

- (1) 400만 원이다.
- (2) 20만 원이다.
- (3) 80만 원이다.
- (4) 800만 원이다.

61. 법인의 상호와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이전 정보가 남아 있다. 새 상호로 물품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 교재의 등록관리 원칙에 맞는 준비는?

- (1) 상호가 바뀌면 모든 과거 계약이 자동 무효이므로 등록을 삭제한다.
- (2) 법인등기만 변경되면 전자조달 등록정보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3) 등록사항의 변동을 확인하여 입찰 참여 전에 필요한 변경등록을 한다.
- (4) 낙찰된 뒤에만 변경정보를 반영하고 입찰 단계에서는 항상 옛 정보를 사용한다.

62. 기관이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정할 물품입찰을 준비한다. 공고 초안에는 개찰시각만 있고 어떤 기준과 자료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지 안내가 없다. 직접적인 보완 항목은?

- (1) 적격 여부는 낙찰 후 계약 이행을 보고 정하므로 사전 안내가 필요 없다.
- (2) 개찰가격만 표시되어 있으면 적격심사라는 명칭은 생략해도 결과가 같다.
- (3) 적용 낙찰자결정 기준과 심사자료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안내한다.
- (4) 평가자료는 업체별로 서로 다른 임의 기준을 적용해 제출받는다.

63. 혁신적 사업이라 일반적인 계약체결 방식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범특례를 검토한다. 담당자가 “혁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기관이 임의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특례는 기존 법령과 무관한 민간 증여 방식으로만 운영된다.
- (2) 혁신성을 자체 선언하면 어떠한 심사·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 (3) 종전 방식으로 어렵다는 사정이 있으면 담당자 개인 승낙만으로 특례가 확정된다.
- (4) 시범특례의 법적 요건과 인정 절차, 별도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64. 교재의 외자구매 흐름에서 국내 외국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외 거래은행이 이를 국외 공급자에게 전달한다. 신용장의 수익자는 국외 공급자이다. 역할 연결로 적절한 것은?

- (1) 국내 은행은 개설은행, 국외 전달 은행은 통지은행, 국외 공급자는 수익자이다.
- (2) 국외 공급자는 개설은행이고 국내 은행은 수익자이다.
- (3) 통지은행이 물품을 제조하므로 통지은행이 공급자이다.
- (4) 수익자는 신용장을 전달받는 은행이므로 공급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65. 납품 이후 여러 수요기관에서 같은 모델의 잠금장치 불량을 신고했다. 개별 기관이 각각 수리받았다는 기록만 있고 공통 원인은 분석하지 않았다. 공급 품질 개선에 필요한 정보 활용은?

- (1) 기관마다 수리했으므로 동일 모델의 결함 자료는 합쳐 보지 않는다.
- (2) 납품이 끝난 뒤의 신고는 공공조달 품질관리 범위가 아니다.
- (3) 품질 신고가 있으면 근거 확인 없이 모든 모델을 동일 결함으로 확정한다.
- (4) 신고·수리·생산 로트 자료를 연결하여 공통 결함과 개선 필요성을 공급자에게 환류한다.

66. 기관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용역을 공고했지만 과업에 야간 장애대응을 새로 넣었다. 전년도 견적을 그대로 재사용하려는 업체의 적절한 검토는?

- (1) 예산 총액이 같으면 요구 인력과 이행범위도 법적으로 같은 것으로 본다.
- (2) 새로운 업무는 낙찰 후 자동으로 제외되므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
- (3) 총액의 같음과 별개로 추가된 운영시간·대응체계·비용을 검토한다.
- (4) 야간 대응은 제목에 없으면 과업서에 있어도 고려하지 않는다.

67. 담당자가 다른 기관의 협상계약 기술·가격 배점표를 가져와 그대로 붙였다. 새 사업은 발주 주체와 적용되는 정보화 지침이 다르다. 적절한 처리 방향은?

- (1) 배점표가 다르면 업체마다 원하는 표를 선택하게 한다.
- (2) 새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지침과 공고된 배점 체계를 확인하여 평가표를 구성한다.
- (3) 가격과 기술 중 평가하기 쉬운 항목만 개찰 후 남긴다.
- (4) 협상계약이라는 명칭이 같으면 모든 기관·사업에서 배점이 하나로 고정된다.

68. 가상 협상에서 허용 상한은 1억 원이다. 제안액 9천5백만 원에 인정된 추가 과업 8백만 원을 반영한 안을 검토한다. 다른 조정이 없다면 적절한 계산·판단은?

예산 상한·제안액·추가 과업은 가상이며 별도의 합법적 예산 증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 (1) 9천7백만 원으로 상한 이내이다.
- (2) 추가 과업 금액만 8백만 원이므로 계약 총액은 상한과 비교하지 않는다.
- (3) 1억 3백만 원이지만 추가 과업이면 상한은 자동으로 없어진다.
- (4) 1억 3백만 원으로 상한을 3백만 원 넘으므로 그 안을 그대로 확정할 수 없다.

69. 2026년 공식 공고의 전자 제출절차에서 파일을 임시저장한 상태이다. 제출 완료로 판단하려면?

- (1) 임시저장 시각만으로 제출 완료 처리
- (2)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제출
- (3) 파일 이름에 최종이라고 쓰면 완료
- (4) 최종 제출 절차와 접수 상태를 확인한다.

70. 가상 등록 용역의 계약단위는 “1인·월”, 단가는 300만 원이다. 기관은 2명을 3개월 이용하려 한다. 세금·부대비용 조건이 같고 별도 할인은 없다면 금액은?

실제 인건비 기준이 아닌 쇼핑물 구매단위 해석용 가상 수치이다.

- (1) 1천8백만 원
- (2) 6백만 원
- (3) 1천5백만 원
- (4) 9백만 원

71. 학습자료 두 곳에서 MAS 계약기간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신규 계약을 준비하는 업체의 적절한 확인 순서는?

- (1) 자료가 충돌하면 업체가 원하는 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다.
- (2) 실제 적용 규정의 시행일과 해당 구매공고·계약문서의 기간을 대조한다.
- (3) 과거 계약기간과 같은 상품이면 현재 공고는 읽지 않아도 된다.
- (4) 자료의 숫자 중 큰 값을 무조건 계약기간으로 선택한다.

72. 신규 수요물자를 MAS로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심의와, 특정 신청업체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적격성평가를 구별한 것은?

- (1) 전자는 제도의 대상 품목·시장 요건, 후자는 해당 업체의 계약 적격성을 중심으로 본다.
- (2) 품목이 MAS 대상으로 허용되면 모든 업체가 자격 심사 없이 계약한다.
- (3) 업체 하나가 우량하면 상용 규격 등 신규 품목 요건은 검토하지 않는다.
- (4) 두 절차는 모두 개별 기관의 최종 납품 검사와 같은 절차이다.

73. 업체의 종합 이행평가가 우수하지만 분야별 결과에서 납기 항목이 낮다. 긴급 납품이 중요한 기관의 적절한 해석은?

- (1) 한 분야가 낮으면 다른 분야에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기록도 거짓이다.
- (2) 종합 결과와 납기 분야의 취약점을 함께 보고 이번 수요의 위험을 검토한다.
- (3) 세부항목은 기관 수요와 관계가 없으므로 절대 볼 수 없다.
- (4) 종합등급이 우수하면 분야별 결과는 모두 최고인 것으로 본다.

74. 준공 후 평가에서 ㉠ 시공업체의 공사 수행 품질과 ㉡ 사업의 예상 수요·비용·편익이 실제와 얼마나 달랐는지를 각각 검토한다. 적절한 구별은?

- (1) ㉠은 시공 수행에 대한 평가, ㉡은 사업 전체의 사후평가 관점이다.
- (2) ㉡의 수요예측 오차는 원인과 무관하게 전부 시공업체의 품질결함이다.
- (3) 두 평가는 모두 다음 입찰의 투찰가격만 정하는 절차이다.
- (4) 시설이 완공되면 예상과 실제의 차이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

75. 같은 유효 입찰자료에서 A는 더 낮은 가격·총점 93점, B는 더 높은 가격·총점 96점이다. 방식 X는 낮은 가격순으로 심사해 92점 이상인 첫 업체를, 방식 Y는 총점이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두 가상 방식의 결과는?

가격범위·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두 방식은 지문에서 정의한 규칙만 적용합니다.

- (1) X와 Y 모두 B
- (2) X와 Y 모두 A
- (3) X는 A, Y는 B
- (4) X는 B, Y는 A

76. 가상 PQ는 “하나의 교량을 연장 200m 이상 시공한 실적”을 요구하며 여러 시설의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업체는 각각 120m인 서로 다른 교량 2개의 실적을 제출했다. 이 규모 요건의 판단은?

단일시설 인정과 수치는 지문에서 정한 학습용 PQ 규칙입니다.

- (1) 120m를 제공하여 실적 규모로 인정한다.
- (2) 길이 합계가 200m 이상이면 단일시설 조건은 자동 충족된다.
- (3) 교량을 두 번 시공했으므로 길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 (4) 합계가 240m여도 단일 교량 200m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77. 가상 변경합의는 삭제되는 기존 공종의 감액을 “감소수량×기존 계약단가”로 정했다. 감소수량 10, 기존 단가 8, 현재 시장단가 11이다. 이 합의에 따른 감액 산정 기준은?

금액 단위는 동일한 가상 수치이고 다른 조정사유는 없습니다.

- (1) $10 \times 8 = 80$ 을 감액한다.
- (2) 계약단가와 시장단가 중 기관에 유리한 값을 임의로 선택한다.
- (3) 시장가격이 올랐으므로 $10 \times 11 = 110$ 을 감액한다.
- (4) 수량이 줄었어도 시장가격이 올랐으므로 감액은 없다.

78. 방식 A는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함께 맡는 제안 구조이고, 방식 B는 발주자가 제시한 원안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안을 제출하는 구조이다. 적절한 연결은?

- (1) A는 원안을 반드시 둔 대안입찰, B는 설계 없는 사후정산이다.
- (2) A와 B 모두 발주자의 원안을 어떤 변경도 없이 따르는 가격입찰만 뜻한다.
- (3) A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B는 대안입찰의 특성이다.
- (4) A는 순수 물품단가계약, B는 하자보증금 반환이다.

79. 가상 실비정액가산 대가 계산은 직접인건비 100, 제경비 110, 직접경비 30에 기술료를 더한다.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이고 세금은 없다. 총 대가는?

금액·비율은 가상이며 실제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법정 요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1) 240
- (2) 282
- (3) 288
- (4) 260

80. 하도급지킴이를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사이의 계약서만 보관하는 자료실”로 소개했다. 교재의 기능 설명에 맞게 보완한 것은?

- (1) 시스템 등록만 하면 기관의 예산 없이도 모든 대금이 자동 생성된다.
- (2) 하수급자에게 계약을 대신 수주해 주는 입찰가격 추천 서비스이다.
- (3) 하도급대금 외에 자재·장비 대금과 근로자 임금 등 청구·승인·지급 흐름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이다.
- (4) 공사 도면만 저장하므로 대금이나 근로자 지급은 대상이 아니다.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